

'89 양돈이슈

축산분뇨처리 문제와 농촌의 현실



황금영

(본회 양돈분뇨처리대책위원장)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축산업자들이 따돌림을 받고 있는 느낌이다. 지금 같은 불황이면 과거에는 <돼지파동>이란 제하에 대서특필될 만한데 관심을 가져주는 매스컴이 없다.

언론매체를 통해 비쳐지는 축산업의 실상은 비극 그것이다. 축산업이 식수를 오염시킨 주범인양 몰아 부치고 있다. 목장주가 구속되고, 양돈장 주인이 구속되는 사례를 흔히 보아 왔다. 요행히 잡혀가지 않은 축산업자들도 언제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지 몰라 불안한 상태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하루하루가 주눅이 들어 눈치 보

기에 급급하다. 한번 냉정히 농촌의 현실과 분뇨처리 문제를 짚어보자.

농촌 총각이 장가 못간다는 것이 사회문제화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농촌 인력이 도시로 대이동하고 있고, 그나마 농촌에 남아 있는 인력은 고령화 되는 추세다. 농촌에서 뭔가 농사를 지어보려 해도 선택할 작목이 없고, 풍년이 되면 풍년이 돼서 죽고 흉년이 되면 흉년이기 때문에 죽는 실정이다.

그래도 축산업이 농촌에서 해볼만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농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작금 분뇨처리 문제로 양돈업자, 낙농업자를 구속시키고 고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 정부가 환경오염원을 제거시키겠다는 방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농촌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몰아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단속은 단속을 위한 단속은 될지언정 문제해결을 위한 단속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양돈경기가 불황에 돌입한 것은 '87년 하반기부터다. '87년 하반기에 서울 3개 도매시장 지육 kg당 평균 가격이 1천7백원을 넘지 못했다. '88년

한해동안도 그 어려움은 계속됐으며, 올 들어서는 불황의 양상이 더욱 심해 '70년대말 돼지파동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의 단속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됐는데, 불행히도 분뇨처리 시설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계속되는 불황 때문에 시설투자에 엄두를 못내게 하는 시점과 맞아버렸다. 분뇨처리 시설을 하려 해도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길이 없는 것이다. 축산분뇨에 대한 환경보전법상 돈사의 경우 423평 이상이면 일반 산업시설과 동일한 폐수시설 설치허가를 얻어야 한다. 423평이면 돼지를 1천3백여두 사육할 수 있는데 분뇨처리장을 만드는데 1천5백만원~2천만원이나 소요된다. 최근 몇년간 계속된 불황에 사료 값도 제대로 못주는 양돈업자들이 이 돈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어느 은행도 축산업자에게 돈을 선뜻 빌려주는 곳은 없다.

축협에서 장기융자가 있는가? 있다면 1년 내에 갚아야 할 단기자금뿐이고, 그 돈도 충분하지가 못하다.

더우기 담보 대출이라도 받고 싶지만 담보가 있는 농장이라면 이미 그동안 계속된 불황으로 다른 곳에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환경청 산하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국민투자기금의 융자추천을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업자가 이용할 수 없는 돈과 마찬가지로.

'89년 환경관리공단기금 운영 현황을 보면 1백59억8천7백만원 융자중 축산쪽에서 이용한 금액은 9억7천6백만원으로 이 자금은 20개 업체에 지원됐다. 1개 업체당 줄잡아 5천만원으로 대규모 업체에 집중됐다. 1천여두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받기도 어려운 돈이다.

분뇨처리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퇴비로 이용될 수 있는 축분을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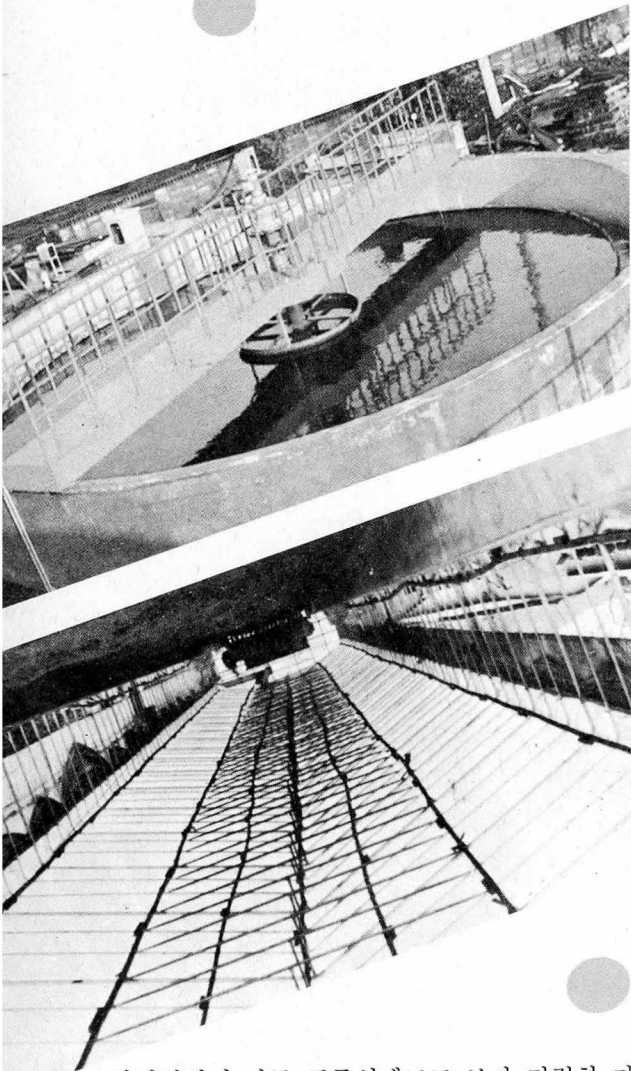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2,500ppm도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화조 설치를 한 후 이 기준치가 나오지 않아 고생하는 양돈장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정화조 설치 업체조차 축분처리시설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 앞으로도 시행착오가 많아야 한다고 솔직히 시인하는 업체도 있는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

99

일반 중금속 등이 함유된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점이다. 환경보전법에 의거 설치된 정화조 시설이 규제하는 배출기준량은 150ppm 이하인데 정화조설치업자조차 일반 산업폐수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할 정도다.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2,500ppm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화조 설치를 한 후 이 기준치가 나오지 않아 고생하는 양돈장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정화조 설치 업체조차 축분처리시설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 앞으로도 시행착오가 많아야 한다고 솔직히 시인하는 업체도 있는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축분은 곧 땅을 살찌게 하는 비료로 이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 정부의 연구기관에서 분뇨를 퇴비화 하는 쪽의 연구를 통해 이 방법을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분뇨를 발효시켜 이를 일반농지나 초지에 분뇨차를 이용해 뿌리려 해도 가까운 곳에 초지가 없으면 이 또한 설치요건을 완화해 주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환경청에서 만든 표준설계도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설치하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해서 양축농가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뇨처리 시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저리의 용자금을 지원 하는 일이다. 자금이 있는데도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지만, 정화조를 설치하려 해도 자금이 없어 못하는 농가에게는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이용

토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양축농가에게 지원할 자금이 없다면 이 자금을 충분히 조성한 후 단속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뿐만아니라, 이 용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가축의 분뇨가 환경오염원이라면 1천두 이상 사육하는 농장이나 5백두에서 사육하는 농장이나 정화조시설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용자폭을 넓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재와 같이 실시되는 강력한 단속은 양축농가를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대로 단속이 계속된다면 양축농가의 구속만이 악순환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전업규모 농장에는 개별업체에게 시설자금을 장기저리 용자해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영세업자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분뇨처리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재원마련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왜 돼지가격이 폭락하는가. 과잉생산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돈육통조림 수입을 자유화 시킨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 받고 있다. 양축가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해 와 양축농가에게 피해를 주고, 내부적으로는 분뇨처리 규제를 통해 단속하니 안팎으로 시달리는 양축가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당국에 바램이 있다면, 양축농가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 이를 용자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분뇨를 일반 산업폐기물과 동일시 하지 말고 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 등에 더 많은 연구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 후 분뇨처리를 하지 않는 양축가를 단속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黃師**